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749
----------	------

발의연월일 : 2024. 12. 19.

발 의 자 : 김정호 · 이수진 · 최기상
박희승 · 전진숙 · 이연희
윤후덕 · 정성호 · 임미애
허종식 · 이훈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분산에너지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경제적 편익 확대를 위하여 노력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당초 분산에너지 사용으로 대규모 발전시설·송전망 설치 불필요, 사회적 갈등 회피 및 전력공급의 안정화 기여 등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재정 당국의 반대로 원안과 달리 “확대”란 애매모호한 선언적으로 규정으로 변경된 사실이 있음,

이로 인해 현행 사회적·경제적 편익의 확대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나 민간으로 하여금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투자 유인의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경

제적 편익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분산에너지 보급 및 투자를 활성화려는 것임(안 제46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 제목 중 “확대”를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포함한다)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를 “포함한다)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경제적 편익 확대를 위하여”를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6조(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 · 경제적 편익 확대) ①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사업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편익(분산에너 지의 사용으로 인한 대규모 발 전시설·송전망 설치 불필요에 따른 비용 절감, 사회적 갈등 회피 및 전력공급의 안정화에 기여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의 <u>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u> <u>다.</u>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u>분산에너지사</u> <u>업의 사회적·경제적 편익 확</u> <u>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u> <u>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46조(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 · 경제적 편익 지원) ① ----- ----- ----- ----- ----- ----- ----- -----포함한다)에 <u>대한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u> <u>원을 하여야----</u>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지원의 절차</u> <u>와 방법에 관하여-----</u> -----.